

지정토론문

-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방안 -

변호사 박기억

1. 문언상 내용이 명백한 약관조항의 배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부분(이하, ‘특약조항’이라 한다)을 보면 아래와 같은바, 그 중 면책제한조항(단서 부분)의 해석은 별 이의없이 명확해 보입니다.

제0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특약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위 조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만,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된다는 것, 즉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임은 문언상 명백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합7199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이 위 특약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주계약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된 약관에 관하여,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책제한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합니다.

위와 같이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의 내용이 문언상 명백함에도 결과적으로 이를 정반대로 뒤집는 결론을 내는 것은

아무리 약관 전체의 내용이나 체계, 재해의 의미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약관규제법이 규정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제4조)¹⁾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제5조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는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반드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인 경우로만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재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 특약의 재해분류표 중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이 과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32개 항목은 모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것인지, 아니면 위 32개 항목의 경우에도 다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재해로 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을 반드시 재해의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더더욱 보험금 지급사유를 특정한 경우(이 사건의 경우 ‘재해’)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디 해당 보험상품이 담보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해당 보험상품이 담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면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보험회사 직원이 12인승 봉고 승합차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가 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가 자신이 소지한 2종 보통운전면허로 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재해사망특약이 원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개별적으로 약정할 수는 있는 것

1)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이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사유, 즉 부책사유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바로 재해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를 부책사유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조항이 보험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특약조항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험자는 보험에 관한 전문가이고, 보험약관은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특히 보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발제자처럼 결론을 낸다면 결국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 참조)인데, ①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합71993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언상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내용이 명백한데다가, ②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도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과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③ 다른 여러 하급심 판결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 ④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적어도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제한

조항에 관하여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에 관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아예 처음부터 없는 조항으로 취급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 내지 법리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끝.

한국금융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진행사회 : 양기진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록 (13:30 ~ 14:00)

개 회 사 및 정 기 총 회 (14:00 ~ 14:20)

정경영 교수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시 간 | 주 제 | 사 회 |
|------------------------------|---|---------------------------------|
| <Session 1> 14:20 ~ 15:30 | 영국법상 Chinese Wall 규제 분석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김용재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순석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홍기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정대익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15:30 ~ 15:50 | Coffee Break | |
| <Session 2> 15:50 ~ 17:00 |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방안 - 자살사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 이성남 교수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최완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현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서성일 변호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국) | |
| <Session 3> 17:00 ~ 18:10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배준석 박사 (한국은행 일반법규팀) | 김병태 교수 (영산대학교 법학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자봉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원동욱 교수 (우송대학교 금융세무경영학과)◦ 이현영 부문장 (ING은행 서울지점) | |
| 18:10 ~ | 폐 회 사 및 만찬 | |